



1인가구 맞춤형
행복정책 시리즈

you're **NOT** alone ②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②

1인가구, 정책패러다임의 담대한 전환

취약가구 보호정책 탈피,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세대·성·환경 맞춤형

| 요약 |

□ 1인가구 증가 원인

- 자발적 1인가구: 결혼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비혼가구의 증가
 - 혼인전 일시적 가구구성 단계가 아니라, 1인 독립생활이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구조화
 - 이혼 이후 재혼의향 감소와 독립생활 기간의 증가
- 비자발적 1인가구: 환경적 고려에 의한 선택
 - 청중년층은 학업, 직장 등의 사유. 장노년층은 이혼·별거·사별 이후 독립생활 유지

□ 1인가구 형성의 차이에 따른 대응 정책의 세분화 필요

- 윤석열정부의 1인가구 정책은 고독사 위험군 예방정책에 한정
- 1인가구 = 취약가구의 등식에서 벗어나 연령대별, 성별, 조건에 따른 다양한 정책패키지 필요

□ 세대별 1인가구 주요 환경

	청년(20~30대)	중장년(40~50대)	노년(60세 이상)
1인가구 사유	자발적·학업·직장	직장·이혼	이혼·사별
소득	20대 보통, 30대 양호	40대 양호·50대 열악	열악
근로양태	높은 상용비율	자영비율 상대적 증가 50대 이후 임시일용 및 무직 비율 증가	저임금 상용비율 증가
주거환경	단독주택, 주택이외의 거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아파트 비율 증가	[남성]단독주택 비율이 높음 [여성]단독주택과 아파트 비율이 80% 이상
	보증금있는 월세(반전세) 비율 가장 높음		
수도권 집중	수도권 진입률 증가	비수도권 비중이 높음	고령화에 따른 수도권 비율증가

□ 1인가구 대세 시대의 사회정책 방향

- 1인가구 및 독립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정책 기본단위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변경
 - 개인의 행복증진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촉진을 새로운 사회정책방향으로 설정
 - 독립가구의 증가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족돌봄의 부재와 함께 저소득 등의 경제적 문제를 야기
-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생활기반 정책의 강화와 동시에 세대특성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주력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및 돌봄지원주택 확대
 - 취업훈련, 성별임금격차 해소 개편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활성화
 -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민관합동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자체의 적극 행정 실현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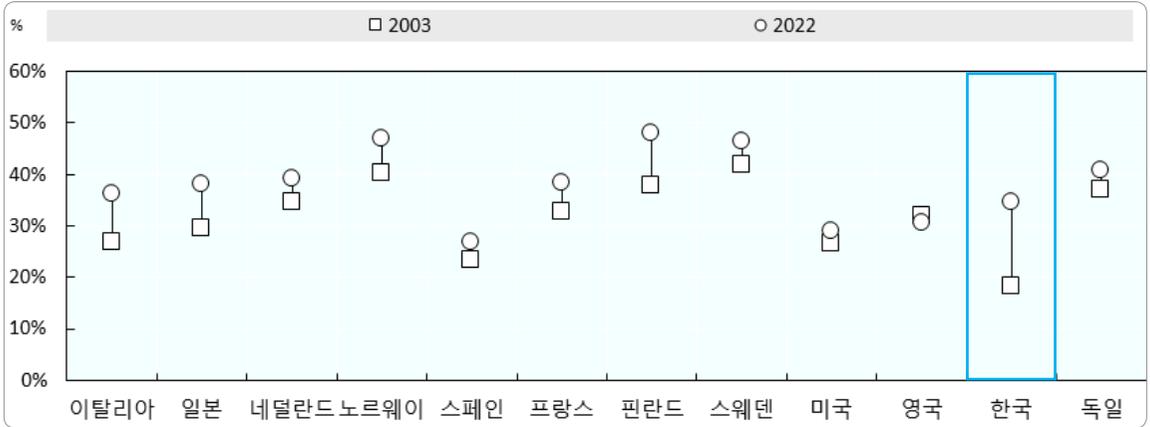
1. 1인가구 대세 시대

○ 한국은 전체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노르딕 국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보다는 낮으나, 최근 20년 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

- 2022년 현재 1인가구는 750만 2천가구(전체 2,177만 3천가구)로 34.5%

- 행정안전부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의하면 946만 1,685가구(전체 2,347만 2,895가구)로 40.3%

[그림1] OECD 주요국 1인가구(one person household)증감 추이(2003-최근연도)



자료: 유럽-EU-SILC; 미국: U.S. Census Bureau; 일본: e-Stat; 한국: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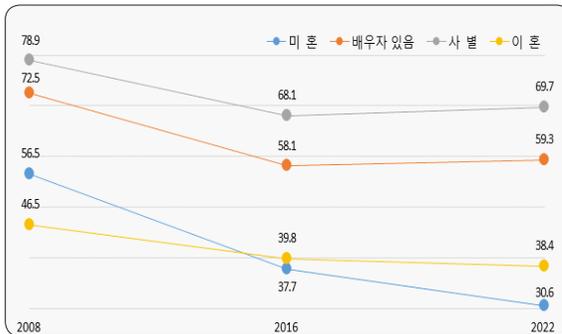
*일본은 2005, 2020. 독일은 2005. 영국은 2005, 2018. 핀란드·스웨덴은 각각 2004.

○ 1인가구 증가의 원인

- 비혼가구의 증가: 결혼관 변화에 의한 결혼의향을 가진 미혼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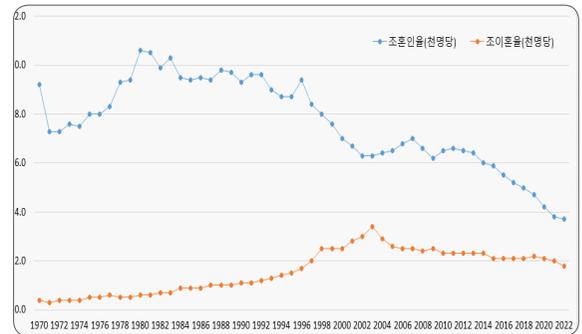
- 1인가구 증가 추세는 이혼율보다는 혼인율의 급격한 감소가 주요한 원인

[그림2] 혼인상태별 결혼에 대한 견해 (반드시 해야 한다+하는 것이 좋다)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그림3] 조혼인률과 조이혼율 증감추이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이혼한 이들(별거 포함)의 재혼 의향도 지속적으로 감소

- 이들의 1인가구 생활기간은 평균 144.8개월(약 12년), 10년 이상 1인가구 지속 기간도 전체 이혼·별거 가구의 56.2% 차지

- 자발적 1인가구: 2020년 현재, 자발적 1인가구(본인의 독립생활을 위해서)는 전체 1인가구의 26.2%

- 혼인전 일시적 가구구성 단계가 아니라, 1인 독립생활이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구조화

- 연령대와 성별 1인가구 사유가 차이: 20~40대에서는 여성의 자발적 사유 비율이 높고, 50대 이상에서는 남성의 자발적 사유가 높음
- 인구고령화로 인한 배우자 사망 이후 독거기간의 증가
 - 혼인상태별 1인가구 구성 요인 중 사별(30.1%)이 이혼(22.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그림4] 성별-연령대별 자발적 1인가구의 비율(202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2. 윤석열정부 1인가구 정책의 후퇴

○ 윤석열정부에게 1인가구 = ‘고독사 위험군’ (120대 국정과제)

- 일상지원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단기 서비스를 지원
 - 일상지원서비스는 기존 긴급복지서비스를 확대한 것으로 저소득층(기초수급자와 차상위)은 기본서비스 면제, 그 외는 신청자의 소득수준에서 따른 차등 자부담
- 1인가구 정책의 방향이 위기가구에 대한 생활서비스에 국한
 - 윤석열정부는 2023년 예산에서 1인가구 주거문제 해결에 중요한 정책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원 삭감한 바 있음
-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중심의 1인가구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상황
 - 경기도는 2022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7개 분야 17개 세부과제 수립
 - 서울시는 2021년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 구성: 건강, 범죄, 고립, 주거 4대 분야 5년 간 5조5789억원 계획 → 2022년 업무 중복을 이유로 별도 국단위 조직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1인가구 담당관’으로 대폭 축소

○ 평가

- 1인가구가 모두 취약가구는 아님. 윤석열정부의 1인가구 정책은 ‘약자복지’의 연장선
 - 세대, 지역, 소득에 따른 다양한 위기가구, 사회적 고립의 문제는 별도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함
- 1인가구 정책은 기존 3~4인 가구를 표준가구화로 하는 ‘정상가족’ 담론의 변화에서 출발해야 함
- 1인가구 정책의 1차적인 목표는 삶의 만족도(행복)의 증진

-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정책세분화
 - 차별화와 구체화: 세대별 1인가구 정책의 차별화와 1인가구 구성 사유에 따른 표적정책으로 구체화
 - 독립생활의 욕구에 의해 형성된 자발적 1인가구는 가족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
- 이미 1인가구 특성에 따른 정책세분화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에서 제시된 바 있음
 - 5대 분야(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를 선정하고, 연령대별·1인가구 형성 사유에 따른 맞춤형 정책의 틀을 제시

[표1] 연령대별 1인가구 형성요인

연령대별	가족관계	직접적 원인	구조적 변화
청년층	분리·독립	비혼·만혼	결혼 가치관 변화
중장년층	가족 해체	비혼, 이혼, 기러기	경제능력, 자녀교육
노년층	가족 구성원 탈락	사별	고령화, 기대여명 차이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1인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I)"

3. 1인가구 현황과 정책방향

1) 1인가구의 구성

○ 1인가구 비율: 성별-연령대별

- 2018년 이후 20대 비중이 가장 높음: 20대 > 30대 > 60대 순
- 성별로는 남성: 30대 > 20대 > 50대 > 40대 순, 여성: 60대 > 20대 > 70대 > 80세 이상 순
- 세대별로 보면 남성은 청년세대(20~30대), 여성은 노년세대(60대 이상) 비중이 큼
 - 청년 남성은 직장(학업), 노년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평균수명으로 사별(이혼) 이후 독립생활 유지가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됨

[표2] 세대별 1인가구 비중 추이(2015, 2022)

	남성		여성	
	2015	2022	2015	2022
청년세대	42.2	40.8	28.6	30.8
중장년세대	39.3	34.1	27.1	22.3
노년세대	17.4	24.4	43.2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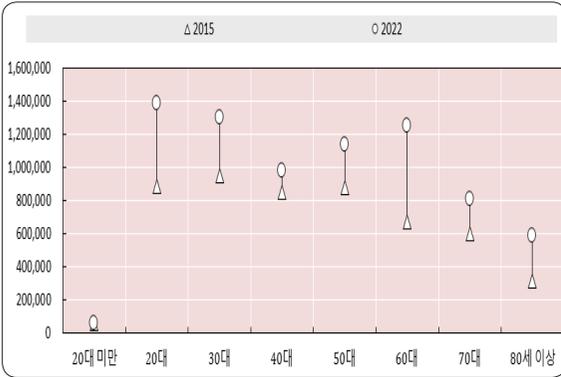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성별-연령대별 증가율

- 2015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8.2%)와 80세 이상(8.2%)
 - 특히 남성 60대와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각각 10.1%, 10.2%)을 보임
 - 세대별로 보면, 초고령시대 도래에 따라 60대 이상에 대한 정책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여성은 60대와 80세 이상 다음으로 20대 증가율이 높음
 - 청년 여성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결혼관의 변화가 1인가구 증가율을 추동
- 전체 비자발적 1인가구의 사유는 직장(46.4%), 가족사유(44.0%, 가족의 직장, 학업, 사별 등), 학업(6.7%) 순 ([그림7], [그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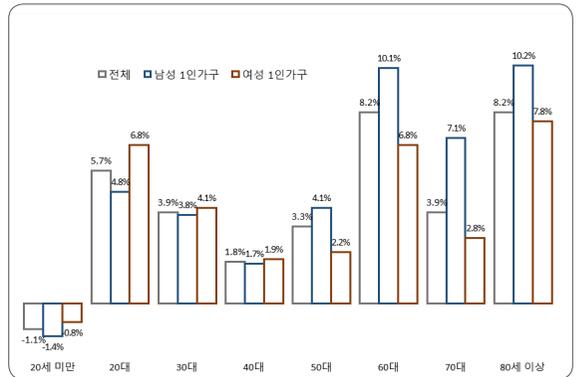
- 남성은 50대까지, 여성은 40대까지 본인 직장 사유가 가장 크고, 남성은 60대, 여성은 50대부터 가족 사유가 가장 큰 이유로 증가. 특히 70대 이상은 가족사별이 1인가구 사유의 60% 상회

[그림5] 성별-연령대별 1인가구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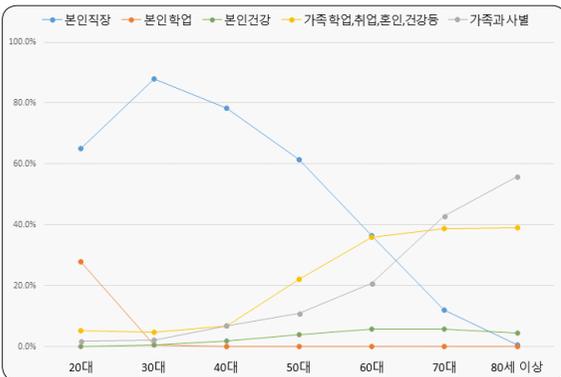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그림6] 성별-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2015~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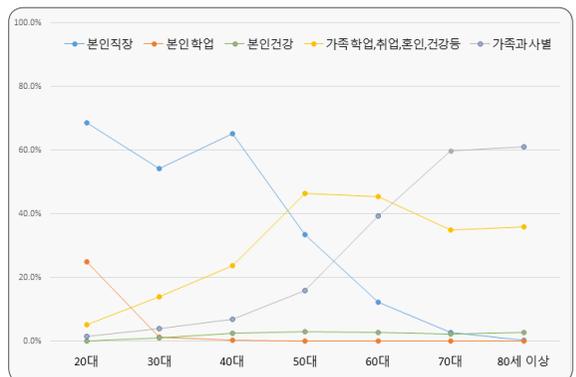


[그림7] 남성-연령대별 1인가구 비자발적 사유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그림8] 여성-연령대별 1인가구 비자발적 사유



2) 1인가구의 소득과 소비

○ 소득: 저소득(높은 빈곤율), 양극화, 30세 미만 1인가구 소득 감소

- 2021년 1인가구 연평균소득은 2,691만원. 중위소득(중간값)은 2,012만원

-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42%(2015년 35.8%)
- 전체가구 중위소득의 40%(2015년 30%)

- 연령대별 가구(경상)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30세 미만에서는 2018년에 비해 2021년 소득이 감소했고, 2인 이상 가구와 차이도 20.4%p 늘어남

- 가구원수를 감안하여 조정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보면, 1인가구가 2인 이상 가구 대비 30, 40대는 양호, 30세 미만과 50대 이상은 열악([표4])

- 2018년 30세 미만에서는 균등화 가처분소득 대비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1인가구 가처분소득이 오히려 높았으나, 2021년에는 70%대로 하락
- 30~40대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 연령대에서 1인가구 저소득 문제가 발생

[표3] 1인가구 vs. 2인 이상 가구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비교(경상소득, 단위: 만원)

	2018			2021		
	1인가구(A)	2인 이상가구(B)	A/B	1인가구(C)	2인 이상가구(D)	C/D
30세 미만	3,126.1	4,568.3	68.4%	2,973.7	6,191.6	48.0%
30대	3,458.6	6,489.5	53.3%	4,277.9	7,988.6	53.6%
40대	3,490.4	7,854.5	44.4%	3,859.4	8,554.8	45.1%
50대	2,357.7	8,120.6	29.0%	2,933.1	9,074.1	32.3%
60세 이상	1,429.1	4,952.1	28.9%	1,765.1	5,894.1	29.9%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 2022(소득은 전년도). 원자료 분석.

[표4] 1인가구 vs. 2인 이상 가구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비교(균등화 처분가능소득,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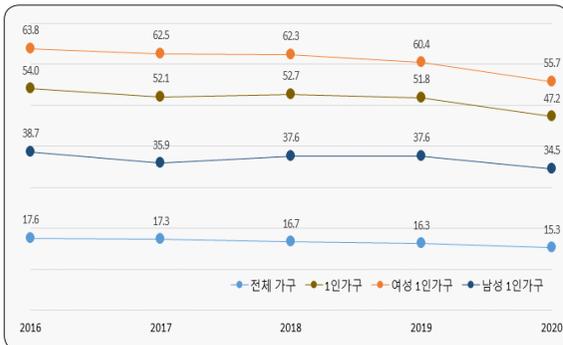
	2018					2021				
	1인가구(A)	2인 이상 가구(B)	2인 이상 가구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C)	A/B	A/C	1인가구(D)	2인 이상 가구(E)	2인 이상 가구 균등화 처분 가능소득(F)	D/E	D/F
30세 미만	2,645.9	3,912.1	2,309.2	67.6%	114.6%	2,537.2	5,375.3	3,320.9	47.2%	76.4%
30대	2,843.1	5,251.6	2,873.6	54.1%	98.9%	3,431.6	6,432.4	3,601.4	53.3%	95.3%
40대	2,720.5	6,224.0	3,229.3	43.7%	84.2%	3,103.0	6,800.4	3,601.5	45.6%	86.2%
50대	1,935.0	6,503.6	3,558.6	29.8%	54.4%	2,395.1	7,279.7	4,038.1	32.9%	59.3%
60세 이상	1,268.6	4,160.3	2,636.5	30.5%	48.1%	1,566.5	4,980.4	3,149.9	31.5%	49.7%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 2022(소득은 전년도). 원자료 분석.

○ 1인가구의 47.2%가 빈곤가구(기준중위소득 5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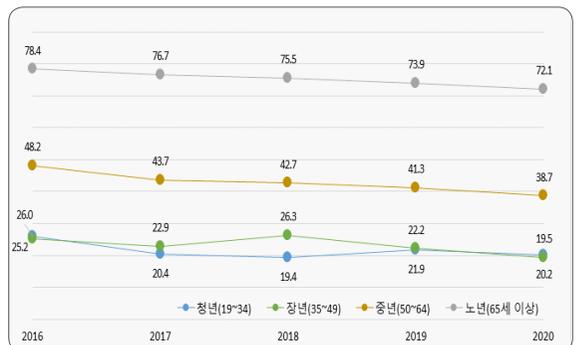
- 여성 1인가구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고, 나이가 들수록 빈곤율은 높아짐

[그림9] 상대적 빈곤율 추이(전체가구/1인가구/성별)



자료: 2022 빈곤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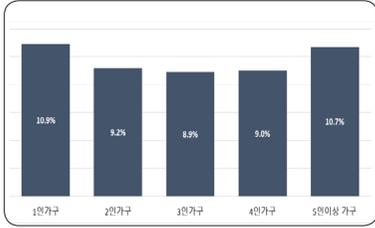
[그림10] 세대별 1인가구 상대적 빈곤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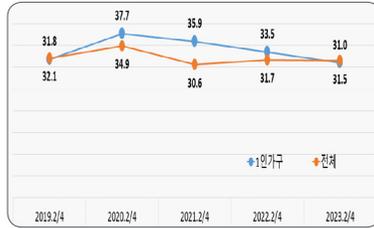
○ 소득격차도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큼: 소득 5분위 배율은 10.9배

- 단, 2015년 이후 소득5분위 격차 폭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줄어들
- 1인가구 소득구성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5.6%로 전체가구보다 6.6%p 높음
- 1인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많기 때문
- 국기초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약 116만 천 가구로, 수급대상 가구의 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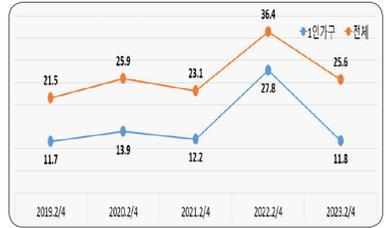
[그림11] 가구특성별 소득5분위 배율(2021)



[그림12] 근로자 1인가구 흑자율 비교



[그림13] 근로자의 1인가구 흑자율 비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소득은 전년도)

자료: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2/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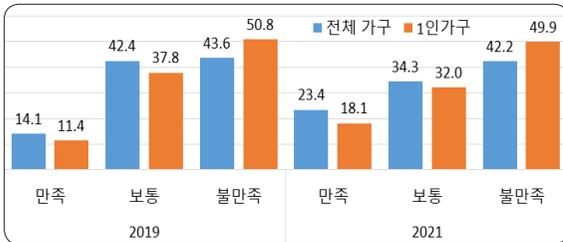
자료: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2/4분기

- 1인가구 소득증가율이 2인이상 가구 대비 높았지만, 2018년 이후 고물가·고금리 영향에 의한 지출 증가로 상쇄
- 근로자와 가구의 전체 평균에 비해 낮은 흑자율은 코로나 이후 자영업 소득위기를 반영함
 - 고용원없는 자영업 비율(영세자영업)이 높은 1인가구의 사업소득은 전체 사업소득보다 현저히 낮음
 - 2022년 2분기 일시적 상승은 코로나19 수혜금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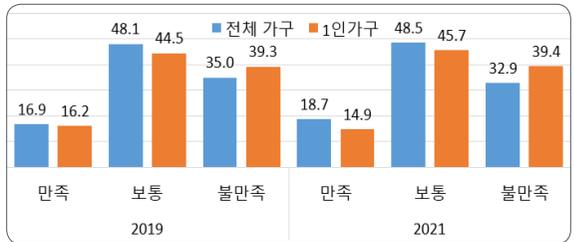
○ 1인가구 소득 및 소비만족도

- 1인가구의 소득 및 소비생활 불만족도가 전체 가구에 비해 높음

[그림14] 소득만족도(1인가구 vs. 전체가구)



[그림15] 소비생활만족도(1인가구 vs. 전체가구)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각 연도.

3) 1인가구의 근로양태

○ 1인가구 고용률

- 1인가구 고용률(취업률)은 2021년부터 전체 고용률을 약간 상회

[그림16] 1인가구 취업률 vs. 전체 고용률(2015~2022)



자료: 지역별 고용조사, 각 연도, 하반기.

○ 1인가구 근로형태(종사상 지위)

- 1인가구는 전체가구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낮고,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음
 - 무직, 학생 등 기타비율이 전체가구의 2배에 가깝고, 보험설계, 대리운전, 학습지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비율도 전체 가구를 상회
 - 반면 자영업비율은 전체가구보다 낮음: 1인가구 자영업자의 80% 이상이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평균연령은 전체가구보다 낮는데, 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1인가구비율이 높다는 점 시사

[표5] 종사상 지위 비교: 전체가구 대 1인가구 및 평균연령(2022)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무직, 학생 등)
	상용	임시/일용	특고	고용원有	고용원無		
전체	44.50%	11.80%	1.45%	4.25%	16.39%	0.02%	21.58%
평균연령(세)	46.9	58.9	48.2	52.0	58.8	48.2	68.6
1인가구	31.88%	16.61%	2.28%	1.75%	10.20%	-	37.29%
평균연령(세)	41.5	58.8	45.6	49.6	58.6	-	70.0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원자료 분석.

-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 비해 여성의 근로비율이 높고, 무직비율도 높음
 - 여성 1인가구의 전체 여성가구주에 비해 상용직과 특고는 평균연령은 낮고, 임시일용직과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연령은 높음
 - 저임금 일자리에 여성 1인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시사
- 1인가구 자영업자는 고용원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가구보다 높음
- 1인가구 중 무직, 학생 등 경제활동 미참여비율은 여성이 남성의 3배에 가까움

[표6] 종사상 지위 비교: 전체가구 대 1인가구 성별 및 평균연령(2022)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무직, 학생 등)
	상용	임시/일용	특고	고용원有	고용원無		
전체 남성가구주	36.23%	7.87%	0.75%	3.69%	13.79%	0.02%	12.46%
평균연령	47.3	57.9	48.5	51.8	58.9	60.5	68.1
남성 1인가구	17.09%	7.26%	0.94%	1.05%	4.99%	-	10.74%
평균연령	41.0	52.4	44.8	47.1	55.4	-	64.5
전체 여성가구주	8.27%	3.93%	0.70%	0.56%	2.60%	0.00%	9.13%
평균연령	44.9	61.2	48.0	53.5	58.5	-	69.4
여성 1인가구	14.79%	9.35%	1.33%	0.70%	5.21%	-	26.55%
평균연령	42.0	63.7	46.2	53.4	61.8	-	72.2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22. 원자료 분석.

4) 1인가구의 주거환경

○ 1인가구의 주거형태의 특징은 전체가구 대비 단독주택과 '주택이외의 거처'의 높은 비율

- 주택이외 거처란 적절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비주택시설로 오피스텔, 숙박업소 객실, 기숙사 및 사회 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고시원(인구총조사에는 기타로 분류) 등을 말함

[표기 주거형태별 증감 추이](2022년 vs. 2015년)

가구종류	주거형태	2015(A)	2022(B)	B-A(%p)
전체가구	단독주택	35.3%	29.0%	-6.2%
	아파트	48.1%	52.4%	4.3%
	연립주택	2.2%	2.1%	-0.1%
	다세대주택	8.9%	9.3%	0.4%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7%	1.4%	-0.3%
	주택이외의 거처	3.7%	5.8%	2.0%
1인가구	단독주택	52.1%	41.0%	-11.1%
	아파트	27.6%	34.0%	6.5%
	연립주택	1.6%	1.8%	0.2%
	다세대주택	8.3%	9.9%	1.6%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3%	1.8%	-0.5%
	주택이외의 거처	8.1%	11.5%	3.4%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 주택이외의 거처 중 오피스텔을 제외하면 고시원(기타)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숙박업소의 객실을 주거시설로 사용

- 1인가구 절반이상이 고시원에 거주하고, 이들 중 48.4%가 30대 미만
- 일터/PC방/찜질방 등/기타에 거주하는 1인가구 중 63.2%는 50대 이상

[표8] 1인가구 주택이외 거처의 종류별(오피스텔 제외) 가구수

	고시원(고시텔)	숙박업소 객실	판잣집·비닐하우스	일터/PC방/찜질방 등/기타
가구수	146,990	28,007	2,557	88,045
비율	55.3%	10.5%	1.0%	33.2%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이외거처 실태조사(2017). 원자료 분석.

[표9] 1인가구 주택이외 거처의 종류별(오피스텔 제외) 연령대/성별 분포

	연령대	성별	가구수	전체 주택이외 거처 가구내 비율(%)		연령대	성별	가구수	전체 주택이외 거처 가구내 비율(%)
고시원 (고시텔)	30세미만	남성	40,845	15.38	일터/ PC방/ 찜질방 등/ 기타	30세미만	남성	7,388	2.78
		여성	30,232	11.38			여성	5,007	1.89
	30~39세	남성	26,134	9.84		30~39세	남성	6,274	2.36
		여성	9,472	3.57			여성	1,640	0.62
	40~49세	남성	14,048	5.29		40~49세	남성	9,548	3.59
		여성	4,039	1.52			여성	2,535	0.95

	50~59세	남성	10,926	4.11		50~59세	남성	17,043	6.42
		여성	2,110	0.79			여성	7,283	2.74
	60세이상	남성	7,761	2.92		60세이상	남성	15,946	6.0
		여성	1,423	0.54			여성	15,381	5.79
숙박 업소 객실	30세미만	남성	1,492	0.56	판잣집 · 비닐 하우스	30세미만	남성	36	0.01
		여성	164	0.06			여성	13	0
	30~39세	남성	997	0.38		30~39세	남성	10	0
		여성	114	0.04			여성	0	0
	40~49세	남성	5,062	1.91		40~49세	남성	136	0.05
		여성	1,098	0.41			여성	26	0.01
	50~59세	남성	7,863	2.96		50~59세	남성	237	0.09
		여성	881	0.33			여성	113	0.04
	60세이상	남성	8,103	3.05		60세이상	남성	836	0.31
		여성	2,233	0.84			여성	1,150	0.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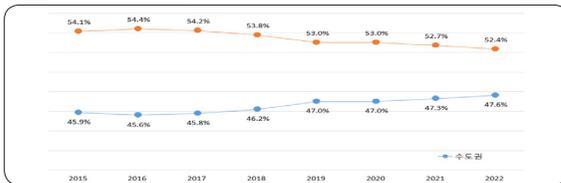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이외거처 실태조사(2017). 원자료 분석.

- 주택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이유는 통근·통학에 좋은 위치(56.6%), 거주비 저렴(24.3%), 고령 또는 건강문제로 이주가 불가해서(9.6%) 순
-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복지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 입주(17.9%), 주거급여(월세보조, 10.9%), 전세자금 대출(9.0%) 제공 순
- 48.2%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가 있음
- 현재 주거시설로 가장 열악한 고시원 등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가 필요
- 1인가구 비거주용 거처(오피스텔 제외)의 높은 비율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이 1인가구 주거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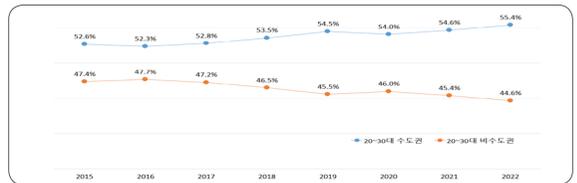
5) 1인가구 수도권 집중 현상

-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으로 1인가구 증가
- 수도권 1인가구 증가는 20~30대 청년층과 60세 이상 노년층이 주도
 - 20~30대 청년 1인가구의 수도권 집중: 일자리 및 생활환경이 가장 중요한 요인
 - 60세 이상의 수도권 거주 증가는 고령화 추세 결과(특히 70세 이상 1인가구 증가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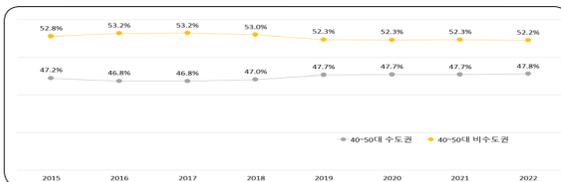
[그림17] 1인가구 수도권 vs. 비수도권 증감추이



[그림18] 청년(20~30대) 1인가구



[그림19] 중장년(40~50대) 1인가구



[그림20] 노년(60세이상) 1인가구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 연도. 필자 계산.

4. 주요 국가의 1인가구 정책*

- 유럽의 1인가구 증가이유
 - 평균수명의 차이: 여성 > 남성
 - 이혼율과 별거율 상승
 -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자발적 비혼 증가
- 보편적 복지에 기초한 사회보장 정책
 - 특화된 1인가구 정책보다는 개인 권리(시민권) 중심의 보편적 복지: 돌봄, 주거 등
 - 1인가구 증가의 현실은 인정하면서 주거정책 중심으로 공동체 유지에 집중
- 세대별 1인가구 관련 정책

<p>[스웨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자율성을 지키면서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동주택 공급과 주거 지원 집중 • 청년층: 직주근접, 문화시설 이용이 용이한 시내중심부에 위치 • 노년층: 스톡홀름 페르드크네펜(Färdknäppen) 등의 코하우징 	<p>[영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및 고령 1인가구를 위해 공공주택(소형 임대 주택이나 노인보호주택, 공동체주택 등)을 건설·공급하거나 청년 대상 주거보조비 지원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글룸 거주 프로그램(SRO) - 주거선택 바꾸처: 노후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을 통해 주거공간 제공하고 임차료 보조 	<p>[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단신세대(1인가구)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 	<p>[프랑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상으로 독신/부부에 소득에 따른 차등적인 노인수당(주거, 가사도우미, 연대수당 등) 지원 - 주거수당: 대학생과 청년 1인가구 대상

5. 1인가구 정책패러다임의 담대한 전환

- 사회보장정책의 기준을 가구에서 개인으로 변경
 - 소득보장정책(국민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세 등)에 적용되는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
 - 1인가구(개인)의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하고 다인가구에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전환: 1인가구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에 유리한 방식
-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 1인가구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직업훈련 다양화 및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안정적이고 질 좋은 주거환경 제공
 - 고시원 등 주택이외 거처(준주거시설)에 대한 기준 강화
 -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1인가구 수요 충족 및 돌봄지원주택 확대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상향: 현행 기준중위소득 47%에서 100%까지 차등적 상향
- 수도권 집중 완화
 - 수도권의 질 낮은 주거와 높은 주거비는 비자발적 1인가구 형성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
 - 지방거주 취업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무상제공과 같은 획기적인 주거인센티브 제공
- 고립 1인가구 대책
 - 은둔형 1인가구, 사별 이후 노년 1인가구 등에 대한 사회관계망 복원프로그램(심리, 소통) 활성화

* 김형균(2019).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세계의 대응"; 이명진(2019). "유럽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1호.